



| | | | |
|------------|---------------------|-----------|-------------------------|
| 코스피 | 2076.92 (-19.08) | 코스닥 | 691.94 (+1.29) |
| 금리 (미국 기준) | 1.98 (0.00) | 환율 (원/달러) | 1123.50 (+1.90) (5일) |



[해설]
삼성의 미래
300억 달러 글로벌 전장시장
한국의 메기 뛰어 들었다
03



혁신도시=유령도시?

균형 발전 명분에 천문학적 비용 살만한도시 만들어야 '시즌2' 성공

정부가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을 키우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한다. 지난 10년 간 혁신도시 조성이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과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10년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됐다. 지금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4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4만9000여명의 기관 직원이 이주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3651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으며 1조 7682억원의 혁신도시 지방세수를 납부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과 지역에서는 여러 불만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주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무엇보다 자녀를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 종합병원이나 교통·쇼핑 인프라도 서울과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340개 추가 입주, 1만명 고용
지역별 테마산업 선정 육성
정주여건 개선, 지역상생 주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읍면동 기준)의 1000명당 병·의원 수는 0.86개로 전국 평균인 1.33개에 크게 못 미친다. 대형병원과 유치원·어린이집 등도 평균보다 적다. 부족한 도시 인프라 탓에 혁신도시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58%에 그치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한 공공기관 직원은 "혁신도시 주변에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말이면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거리 출장 피로에 따른 근무 질 저하, 업무 연속성 단절, 유관 기관 간 소통 단절 같은 수직화

하기 어려운 무형적 비효율 요소까지 따지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2022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섬처럼 고립된 혁신도시를 산업 특화도시로 만들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입주기업은 현재 639개에서 2022년 1000개로, 고용인원은 현재 두 배인 2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첫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10년 전략인 시즌2에서는 상생발전이 목표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 도심이나 산업과 연계할 만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5년 안에 청사전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153개 대상 공공기관 중 147개가 이전을 완료했지만, 올해 6월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입주율은 32.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테마를 정해 특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경북은 겸점단자동차, 울산은 친환경에너지, 전북은 농생명융합, 전남은 에너지신산업, 경남은 항공우주, 부산은 첨단해양, 대구는 첨단의료융합산업, 그리고 제주 스마트MICE로 각각의 테마를 정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수렴했지만, 당장 기업과 인력을 불러올 만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 10개 지역의 만족도 조사는 52.4점에 불과했다. 그 중 교통에 대한 만족도 44.5점, 편의·의료서비스는 49.9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현대차발 신용 리스크 韓경제 저성장 먹구름

현대·기아차, 모비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어
타 기업으로 확산 우려

현대자동차가 20년 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달 31일(현지 시각) 글로벌 최대 신용평가사인 S&P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는데 이어 지난 1일 무디스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등급은 Baa1 유지)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차입금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의 무역분쟁 심화, 기업의 공격적인 재무정책, 규제위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같이 밝힌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S&P를 포함해 무디스와 피치 등이 국내 대기업에 심심찮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당장은 경고장이지만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특히 기업들은 수출길과 자금 조달 길이 막힐까 좌불안석이다. 신용등급에 민감

한 글로벌 자금시장에선 이들은 '추락한 천사(fallen angel)'로 부른다. 이들의 경고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韓경제 이끄는 쌍두마차, 현대차 이어 다음 타깃은?
가장 앞장 서서 한국 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신평사는 S&P다. 지난 10월 S&P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기 위해선 "한국 경제가 현재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회복력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P는 문재인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S&P는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혜택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결국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



환영받는 김성숙 여사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성숙 여사가 5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A SN 종합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대 개혁 통해 존경받는 1위 철강사 되겠다"

최정우의 포스코 개혁안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00대 포스코 혁신안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의 100대 개혁과제 핵심은 '모두 함께, 차별없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였다.

포스코는 5일 최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에서 포스코그룹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전 임원이 '5대 경영개혁 실천 다짐

〈포스코 개혁과제 주요내용〉

| | |
|-----------|---|
| 비즈니스 분야 | ▲철강사업 : 2025년까지 자동차강판 판매량 1200만톤 달성 ▲기술개발 : 자력 독자 기술개발 체제에서 탈피해 외부기술을 수용하는 개방형 협력 제휴 기술개발로 전환 ▲포스코대우, 포스코의 LNG트레이딩 사업 일원화 ▲포스코건설, 건축설계, 시설관리 등 유사한 성격의 그룹 사업통합 ▲포스코에너지, LNG터미널과 함께 국내 발전 및 해외 IPP 통합관리 ▲침상코크스 공장 신설 및 포스코퀵테크 "이차전지 종합연구센터" 설립 ▲"신성장부문"으로 조직 격상 및 총괄책임자 외부전문가 영입 |
| 사회와 공동발전 | ▲실행조직 신설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해결 ▲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거래문화 정착 ▲주주친화정책 확대 |
| 기업문화 및 제도 | ▲현장과 협조가 필요한 조직을 포함, 광양으로 현장중심조직 전진 배치 ▲기술멘토링 제도로 선, 후배사원간 기술과 업무노하우 전수 ▲협력사 처우개선 |
| 신설조직 |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 설치 ▲기업시민위원회 산하 실행조직, 기업시민실 설치 ▲신사업부문 부문제로 격상(부문장 외부인사 영입) ▲산학연협력실 신설 |

문'에 서명했다. 〈관련기사 6면〉 최 회장은 이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善循環)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며 "투철한 책임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을 강조했다.

이날 포스코 전 임원이 서명한 '5대 경영개혁 실천 다짐문'은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의 주체로서 기업시민 포스코를 선도 ▲투철한 책임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성장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하고, 직원과 조직 역량 육성에 매진 ▲실질·실행·실리에 기반해 현장을 지향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100대 개혁과제'는 지난 7월 취임을 전후해

사내외로부터 받아들인 3300여건의 건의사항과 임원들의 개혁 아이디어, 포스리 자문 교수 등의 의견과 더불어 평소 최 정우 회장이 생각했던 개혁방안을 현업부서와의 토론을 통해 추려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혁 과제의 실행을 통해 지난 5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2030년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3조원의 장기 목표 달성 방안도 더욱 구체화됐다고 포스코 측은 전했다.

특히 개혁과제 시행 5년 후인 2023년에는 회사의 위상을 포춘 존경받는 기업 메달 부문 1위, 포브스 기업가치 130위라고 명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몰입도와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양성문 기자 ysw@